

April 2026
No. 376

INSS

전략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분석

김인태
tae@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분석
- III.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의 구성과 특징
- IV. 총평 및 정치적 함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분석

I. 문제 제기

II.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분석

1. 최고인민회의 선거 제도와 헌법상 절차
2. 김정은 시대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주요 특징
3. 제15기 선거 및 대의원 구성

III.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의 구성과 특징

1. 국무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내각

IV. 총평 및 정치적 함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분석

저자 | 김인태

국문 초록

북한은 지난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이어 3월 22일~23일까지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했다. 수령 중심의 장기체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과정은 국가수반의 대표성과 유일지배구조 권력구성의 중요한 절차로 제도화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에는 당·정·군의 주요 직책과 핵심계층이 망라된다. 제15기에는 이전 13~14기에 비해 상부 권력층보다 하부 선도역량의 비중을 늘렸다.

노동당은 9차 당대회를 '김정은 2.0 시대'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준비했고,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를 2년간 연장하여 당·국가권력의 운용체계를 일체화 시켰다. 사실상 5년 주기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인사 시기를 통합하여 당·정·군 권력구조의 정상 관리와 효율성을 높였다. 국무위원회는 당과 경제, 외교 등의 주요 직책과 신임도가 높은 측근 역량으로 재구성했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장기간 활약하며 유일체제 강화를 주도했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으로 '김정은 2.0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입법화로 추진하는 중임을 맡았다. 향후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되어 온 '당정책 입법활동'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권능·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도 당정책 관철과 경제개선을 우선하며 당·정 권력과 현장에서 검증된 인물들로 전열을 정비했다. 향후 2026~2031년간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과 주요 직책에 임명된 권력 엘리트들의 책무 수행과 이에 따른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주제어: 최고인민회의, 헌법, 국가지도기관, 국무위원회, 내각

I 문제 제기

- 북한은 지난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이어 3월 22일~23일까지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국가지도기관을 구성¹
 -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총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거했고, 여기에는 북한 권력구조의 당·정·군 권력 엘리트들과 핵심계층이 망라
 - 제15기 1차회의에서는 △국가지도기관 선거 △국가수반 시정연설 △헌법 개정 △5개년계획 및 국가예산 총화·심의 등 관련 의제를 논의
- 5년 임기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과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의 권한을 행사²
 - 제15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향후 2031년까지 5년간 국가 입법활동과 정책심의 등의 의정을 총괄
 - 제15기에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기구는 9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의 추진과 집행을 전담
- 본 전략보고는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와 제15기 1차회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가권력의 구성과 변화에 따른 정치적 함의를 고찰³

1 이 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및 제1차회의의 관련 보도내용을 기초로 작성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공보,” 『로동신문』, 2026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회의의 1일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2026년 3월 2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회의의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6년 3월 24일.

2 『사회주의헌법(2019)』, 제87조.

3 북한의 헌법상 국가권력기구는 “공화국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의,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의 지위를 가진 국무위원장, “공화국 최고정책적지도기관”으로서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인 내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과 새로 구성된 국가지도기관의 당·정·군 권력 엘리트의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김정은 시대 제13기부터 제15기까지 약 15년 기간을 위주로 당·국가지도기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참고로 활용했다.

II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분석

1.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제도와 헌법상 절차

-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⁴ 이후 3대 세습체제의 78년 기간 최고인민회의는 총 15차의 회기와 선거 절차를 진행
 - 시대별로는 △김일성 시기/1~9기(46년) △김정일 시기/10~12기(17년) △김정은 시기/12~15기(15년)에 거쳐 총 100여 차의 정기회의 개최⁵
 -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상 임기는 3년~5년을 주기로 했으나, 한국전쟁과 국가수반 사망 등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 지연
 - 대표적인 임기 지연 사례는 △김일성 시기/한국전쟁 △김정일 시기/김일성 사망 △김정은 시기/당·국가 주기 일체화⁶ 등으로 구분
 - ※ 북한은 제14기의 2년 연장에 관해 헌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정'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2월 9차 당대회에 연이은 제15기 선거와 제1차회의 개최로 당-국가지도기구들의 운용 주기를 일체화

4 이종석, “1948년 4월에 있는 남북연석회의 결정에 입각하는 형식을 취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토의되었던 헌법 초안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로동당은 남북총선거 실시 준비에 들어갔다. 남한지역의 대표선출을 책임진 남로당의 경우 비밀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1,080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997명이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시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 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인구 5만 명당 1명씩의 비례에 의해서 남한측 몫인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북한 지역에서도 8월 25일 212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북로당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뽑힌 572명의 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정식으로 헌법을 채택하고 1948년 9월 9일 북한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205~206.

5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회기별 정기회의는 △김일성 시기/제1-9기 기간 내 66회 △김정일 시기/제10-12기 4차 기간 내 16회 △김정은 시기/제12기 5차-15기 기간 내 23회 등 총 105회로 나타난다.

6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90조.

〈표 1〉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기 및 대의원 선거 일정(1948~2026년)

회기	선거일 (요일)	헌법상 임기	대의원	국가수반	수반 선거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설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15기	2026.3.15.(일)	5년	687명	김정은	미선출	조용원	조용원
연장 ~	임기 5년 → 7년 (제9차 당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주기 동일)						
제14기	2019.3.10.(일)	5년	687명	김정은	미선출	최룡해	박태성, 박인철
제13기	2014.3.9.(일)	5년	687명	김정은	111호(軍)	김영남	최태복
제12기	2009.3.8.(일)	5년	687명	김정일	333호(軍)	김영남	최태복
제11기	2003.8.3.(일)	5년	687명	김정일	649호(軍)	김영남	최태복
제10기	1998.7.26.(일)	5년	687명	김정일	666호(軍)	김영남('98~2019)	최태복
연장 ~	임기 5년 → 8년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유훈시기 3년 경과)						
제9기	1990.4.22.(일)	4년 ⇒ 5년	687명	김일성	락원선거구	양형섭	최태복
제8기	1986.11.2.(일)	4년	655명	김일성	대안선거구	양형섭('83~'98)	양형섭
제7기	1982.2.28.(일)	4년	615명	김일성	덕천선거구	황장엽	황장엽
제6기	1977.11.11.(금)	4년	579명	김일성	안주선거구	황장엽	황장엽
제5기	1972.12.12.(화)	4년	541명	김일성	희천선거구	황장엽('72~'83)	황장엽
제4기	1967.11.25.(토)	4년	457명	김일성	송림선거구	최용건	백남운
제3기	1962.10.8.(월)	4년	383명	김일성	강선선거구	최용건	최원택
제2기	1957.8.27.(화)	3년 ⇒ 4년	215명	김일성	-	최용건('57~'72)	최원택
연장 ~	임기 3년 → 9년 (6.25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시기)						
제1기	1948.8.25.(수)	3년	572명	김일성	-	김두봉('48~'57)	허 헌

자료 출처: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 수령 중심의 장기체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과정은 국가수반의 대표성과 유일지배구조 권력 구성의 중요한 절차로 제도화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형식상 유지하던 최고지도자의 입후보와 선거방식도 '추대' 절차로 변경하여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

7 김정은(정치국 상무위원·당중앙위원회 비서)은 제501호 송림선거구에서 제7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처음 선거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로동신문』, 1982년 3월 2일.; 이후 제8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서는 평양시 제515호 룡성선거구,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서는 함북 제575호 무산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참고로, 최고지도자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입후보와 선거 결과를 보도하는 방식에서 제1기~5기까지는 '당선' 용어로 보도하다가 1977년 제6기부터는 “추대되시었다.”는 존칭상 용어로 구분하여 보도하는 등 우상화 성격이 확대되었다.

- 이마저도 김정은 시대에는 최고지도자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불출마’를 헌법상에 규정하고 국가수반의 초헌법적 대표성을 명문화⁸

■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절차에서 시기별 헌법개정 연혁은 북한 세습체제의 계승성과 유일지배구조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설명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제헌 당시 3년 임기에서 4년(1954년)→ 5년(1992년) 주기로 변화하며 유일체제의 의사결정기구로 고착화

※ 국가 입법기구의 적정 임기보다는 수령제 중심의 정치기구, 일체적 의사결정기구로 대체되며 4년~5년 주기를 최적의 회기 기간으로 선정

- 헌법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제헌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헌법)으로 총 3차의 제·개헌사를 기록

〈표 2〉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헌법개정 연혁(1948~2026년)

시대별	최고인민회의	회기 연도	헌법개정 (총 19회)	명칭 및 주요 내용
김일성 시기: 1948.9~1994.7	제1기~9기	46년간	7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제헌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내용) 정권수립, '주석제' 유일체제 명문화
김정일 시기: 1994.8~2011.12	제10기~12기	17년간	3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김일성헌법, 국방위원회 개편 (내용) 정통성, 체제유지·유일체제 명문화
김정은 시기: 2012.1~2026	제12기 5차~15기	15년간 (26.3)	9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내용) 김일성-김정일헌법, 국무위원회 개편 국가대표성 명문화, 핵무력정책 헌법화 등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 헌법의 성격은 제헌 헌법이 규정한 '인민민주주의'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국가적 의미에서 점차 유일체제의 '통치헌법'으로 사문화되었고, 이는 현행 헌법상 '김일성·김정일헌법'의 명문화로 귀결

- 역대 20여 회의 헌법개정 연혁에서 중요 내용은 헌법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정의 이외 △선거제도 개편 △수령체제 제도화(주석제·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 △국가권력기구 개편 등에 집중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민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101조.

-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헌법개정은 체제 정당화와 유일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표 2)되었고, 이번 15기 헌법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상에서 '김정은 헌법'의 성격과 의미를 확대

2. 김정은 시대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주요 특징

-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제15기까지 15년간 3차의 대의원 선거 절차를 진행
 - 2014년 제13기 대의원은 약 55%의 교체율로 김정은 집권 초기 권력 기반 조성과 당·정·군의 부분적인 역량 교체 및 정비에 집중⁹
 - 2019년 제14기는 약 51% 교체율로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권력 변동까지 반영하여 당·정·군의 세대교체 및 역량 강화를 병행
- 2014~2019년간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 및 정책적 방향성을 중점으로 당·정·군 권력층과 핵심계층을 선도적 역량으로 정비
 - 앞선 '선군시대'에 상향된 군부의 정치적 지위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대의원 687명의 구성상 약 20% 이하 수준의 상대적 규모를 유지
 - 노동당 지도력 강화를 중점으로 주요 정책방향인 △핵·군수부문 △건설정책 △대외·대남부문의 주요 직책과 인물군의 지속성을 유지
 - 한편 이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을 명예직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관례를 탈피, 점차 당·정·군 공로자들과 상위 권력층의 비중을 제한
 - 특히 제14기부터 정권 사상 처음으로 국가수반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불출마가 시행되었고, 이는 역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제로 작용
 - ※ 제14기(2019~2025년) 7년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독려는 제8기 당지도기관의 '임기책임' 요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9 2014년 3월 9일에 진행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앞서 2013년 12월에 불거진 '장성택 숙청 사건' 등의 정치적 여파로 내부가 최대로 긴장된 속에서 진행되면서도 전체 대의원의 교체 비율은 55% 수준을 유지했다. 당시 기준에서 약 20년간의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는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교체율 65%, 2003년 제11기 50%, 2009년 제12기 45%였다. 참고로 당시 김영정 당 부부장은 제13기 보궐선거로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임명되었다.

〈표 3〉 제13기~제14기 대의원 부문별 구성 비교

구분 (총수: 687명)		제13기 (14.3.9)		제14기 (19.3.10)	
		인원	비율	비율	인원
계층별	군인	17.2%	118명	17.2%	118명
	노동자	12.7%	87명	16.2%	111명
	농민	11.1%	76명	9.6%	66명
	당·정권·행정간부 근로·과학·교육·보건·체육·총련	59.0%	406명	57.0%	392명
자격별	김일성·김정일 표창 수훈자	30.2%	207명	20.7%	142명
	영웅(공화국영웅, 로력영웅)	14.6%	100명	13.5%	93명
	학위, 전문가 이상	91.7%	630명	92.0%	632명
	대졸 이상	94.2%	647명	94.8%	651명
연령별	39세 이하	3.9%	27명	4.8%	33명
	40세~59세	66.9%	460명	63.9%	439명
	60세 이상	29.2%	200명	31.3%	215명
성비	여성	16.3%	112명	17.6%	121명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 참조.

3. 제15기 선거 및 대의원 구성

- 김정은 시대 이후 총 3기 중, 이번 제15기 대의원 선거에서 제일 높은 교체율 기록
 - 제15기 687명 대의원 중 약 530여 명이 새롭게 선거된 인물들로 약 78% 수준의 교체율로, 김정은 시대 이후 최대 변동 비율임
 - 헌정사상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김일성 시기 제3기의 71%, 김정일 시기 제10기의 64% 교체율 대비 최대 규모의 변동 폭을 기록¹⁰
 - 기본 이유는 이번 선거가 2년가량 지연된 문제와 함께 △당·정지도기관의 ‘임기책임’ 강조 △간부층의 실력과 능력 중시 △공업·농업 등 하부구조 강화 △세대교체 등 9차 당대회 인사기조가 반영

10 김일성 시기인 1962년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당시 기존의 5만 명 당 1인에서 3만 명 당 1인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규모가 증가(215명→383명)하면서 신규 당선자를 중심으로 71%의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김정일 시기인 1998년 제10기 선거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근 8년 만에 진행되면서 64%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 제15기 대의원의 부문별 구성에는 앞선 제13기, 14기와는 차별적인 정치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
 - 제14기와 비교시 특징은 체제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업·농업부문의 대폭 증감 △군부의 대폭 감소 △당·정의 조정 등임
 - <표 4>와 같이 공업·농업부문은 14기 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감했고, 이에 비해 군인(무력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또한 당·정·군 핵심 엘리트의 당직(9기 당지도기관)과 국가직(대의원)의 겸직 최소화(軍 상층부 포함)로 공업·농업 등 하부구조를 안배
 - ※ 당에서는 그간 당연직으로 포함되던 당중앙위 제1부부장급을 축소, 무력기관도 상층부는 줄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공로자) 비중을 높임¹¹
 -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조에서 지난 시기 관례화되었던 당·정·군 지도부의 규모는 줄이고 공업·농업(지방정책·농촌강령) 등 정책 하부구조의 비중을 늘리는 정치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추구

<표 4> 제14기~제15기 대의원 부문별 구성 비교

구분 (제15기 부문별 발표 기준)	제15기('26.3.15) 총 687명		제14기('19.3.10) 총 687명		비고 (15기 변동 비율)	
	비율	인원	인원	비율		
공업부문(노동자)	201명	29.2%	111명	16.2%	▲81.0%	
농업부문(농민)	100명	14.6%	66명	9.6%	▲51.5%	
기 타 부 문	국토·산림·도시경영·봉사부문	15명	2.2%	392명	57%	▼17.3%
	과학·정보산업·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체육·혁명사적부문	70명	10.2%			
	정권기관	170명	24.7%			
	사회단체	10명	1.5%			
	우당·종교단체	6명	0.9%			
	당기관	53명	7.7%			
	소계	324명	47.2%			
무력기관(군인)	62명	9.0%	118명	17.2%	▼47.5%	
* 여성	108명	15.7%	121명	17.6%	▼17.4%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11 제14기까지 당연직으로 추천하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급도 대부분 제외하고 군수공업부 김정식 제1부부장 정도만 잔류시켰다. 군수공업부의 경우 13기, 14기에 홍승무 제1부부장, 홍영철 부부장 등 핵심 인물들을 배치했던 전례에 비해 이번 15기는 거의 제외했다.

- 687석 대의원 선거구 배치에서 지역·부문별의 안배와 함께, ‘적대적 두 국가’ 차원에서 무력기관의 선거구 명칭 중 한국 관련 내용 삭제
 - 지역별 선거구는 1~2석 규모로 평양시, 황남, 함남, 남포시, 무력기관¹²이 증가했고 평북, 함북, 자강, 량강 등 지역은 감소
 - 제13~14기까지 유지했던 무력기관(군, 정보·안전) 선거구의 위장 명칭(山, 江)에서 한국 관련 명칭(한라산, 태백산, 십진강)은 삭제
 - 과거 군의 ‘조국통일’ 임무의 상징성을 대표하던 한국 명칭의 폐기 조치와 함께, 1차회의 헌법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예상은 이번 15기 최고인민회의 전개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평가

〈표 5〉 제13기~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지역구 배치

구분	지역별(부문)	제13기	제14기	제15기	비고(14기 대비)
1	평양시	81석	82석	84석	▲2석 증가
2	평안남도	82석	82석	82석	-
3	평안북도	81석	80석	78석	▼2석 감소
4	황해남도	59석	59석	60석	▲1석 증가
5	황해북도	62석	62석	52석	▼10석 감소(개성특별시 분할)
6	자강도	38석	38석	37석	▼1석 감소
7	강원도	38석	38석	38석	-
8	함경남도	77석	77석	78석	▲1석 증가
9	함경북도	57석	57석	55석	▼2석 감소
10	량강도	20석	20석	19석	▼1석 감소
11	남포시	23석	23석	24석	▲1석 증가
12	라선시	8석	8석	8석	-
13	개성시	-	-	10석	개성특별시 승격(*19.2)
14	무력기관	61석	61석	62석	▲1석 증가
총계		687석	687석	687석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12 제13~14기까지 무력기관(군인)의 대의원 입후보는 공식적인 선거구 할당 이외, 지역 주둔부대와 군사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선거구들에 별도로 약 40% 규모의 군인 지표를 배정했었다.

- 이번 15기 선거에서는 2023년에 새로 개정된 현행 선거법의 절차상 위반과 유권자 ‘반대 투표율’ 공개 등 다양한 특징도 식별
 - 현행 선거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일정을 ‘60일 전에 공포(11조)하게 되어 있으나 12일 전에 약식으로 발표, 이후 기본 선거 절차도 단축
 - 이번 선거 결과 발표에서는 이례적으로 반대투표 현황을 공개했는데, 이는 제1기 최고인민회의 이후 첫 반대투표 사례로 기록¹³

13 북한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들 가운데서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투표율 100%, 찬성률 100%”을 선전하던 북한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동년 11월에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 0.09%의 반대표를 공개한 바 있는 데,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서도 0.07%의 반대표를 공개한 것이다.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사례 중 제1기에 해당하는 1948년 8월에 있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최초로 0.15%의 반대표가 있었다.

III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의 구성과 특징

1. 국무위원회

- 2016년 6월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2019년 헌법 107조)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
 - 과거 김정일의 선군시대에 ‘당·군 협의체’ 성격으로 유지했던 국방위원회와 달리 새로운 ‘당·정·군 협의체’ 구조의 국가지도기구로 출발

〈표 6〉 국무위원회 시기별 구성 비교

구분	구조	구성			비고
		당	정	군(무력)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2026.3.22)	국무위원회 14명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6명 (43%)	5명 (36%)	3명 (21%)	당·정·군 협의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2019.4.11)	국무위원회 14명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6명 (43%)	4명 (28.5%)	4명 (28.5%)	당·정·군 협의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2016.6.29./신설)	국무위원회 12명 (위원장, 부위원장 3명, 위원 8명)	6명 (50%)	2명 (17%)	4명 (33%)	당·정·군 협의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2014.4.9)	국방위원회 9명 (제1위원장, 부위원장 3명, 위원 5명)	2명 (22.2%)	-	7명 (77.8%)	당·군협의체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 공식출범 10년 차 권력 3기에 해당하는 15기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당·정·군 지도부로 재구성

- 당·정 중심의 국무위 구성에는 7년간의 세대교체와 인적 변동 반영
 - 당은 조직·검사·군정·국제·근로단체 등 핵심부서가 포진했으며, 정은 상임위원장, 총리·제1부총리, 외무상 등 경제·외교 부문을 선임하고 군은 국방상, 국가정보국장, 사회안전상이 포함
 - 14기 대비 당은 대남·군수 대신 군정·근로단체가, 정은 외무성 제1부상 대신 내각 제1부총리가 선임되고, 군은 총정치국장이 탈락

〈표 7〉 제15기 제1차회의 국무위원회 구성 비교

구분	제14기 1차(19.4.11)		제15기 1차(26.3.22)		유임자 (5명)	
	직책(겸직)	이름	이름	직책(겸직)		
1	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총비서	김정은
2	1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	부위원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경제)	박태성	내각 총리	
4	위원	김재룡	내각 총리	김재룡	당 비서(조직지도부장)	김재룡
5	위원	리만건	당 부위원장(조직지도부장)	리히용	당 비서(검사위원장)	
6	위원	리수용	당 부위원장(국제부장)	정경택	당 비서(군정지도부장)	정경택
7	위원	김영철	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김성남	당 비서(국제부장)	
8	위원	태중수	당 부위원장(군수공업부장)	주창일	당 비서(근로단체부장)	
9	위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	최선희
10	위원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국방상	노광철
11	위원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12	위원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창대	국가정보국장	
13	위원	정경택	국가보위상	방두섭	사회안전상	
14	위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철원	최고검찰소장	
계	▲당/6명 ▲정/4명 ▲군/4명 *여성 1명			▲당/6명 ▲정/5명 ▲군/3명 *여성 1명		

- 앞선 14기 1차 국무위원회 중 유임자는 5명으로 김정은 외, 당시 직책을 기준으로 김재룡(총리), 정경택(국가보위상), 최선희(외무성 1부상), 노광철(인민무력상)이며, 이들은 15기에도 당·정·군의 요직에 선임
- 참고로, 국무위원회 총 3기 기간 내 여성 엘리트는 최선희와 제14기 5차(21.9)에 보임된 김여정(당시 당 부부장)까지 두 명이 전부임

- 한편 당·정·군의 권력 엘리트 구성 대비, 상설적 기능 여부는 미정
 - 9차 당대회 결정관철 방향에서 당과 경제, 외교 등의 주요 직책과 조용원, 김재룡, 최선희, 김덕훈 등 신임도가 높은 측근 역량으로 구성
 - 단, 국가최고지도기관의 성격에 맞게 국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은 강화했지만, 국무위원장의 대표성이 핵심이며 실제적 기능은 제한적
 - 국무위원회는 2016년 신설 이후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 여타 국가지도기관에 비해 유일체제 중심의 '상징적인 국가기구'로 존치됐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한성은 15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제15기 개회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기구체계, 기능·역할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
 - 우선, 제15기 1차회의 운영상 의정 절차인 △최고인민회의의 의장·부의장 겸직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절차 변경 등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능, 기능 측면까지 상향 조정¹⁴
 - ※ 앞선 14기까지 분리해 운영하던 최고인민회의의 의장·부의장(총 3명)을 현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겸직했고, 그간 주로 당 간부부장이 맡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절차도 상임위 서기장이 대행
 - 둘째, 1차회의 의정에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선거"를 단독의제로 상정, 3개 부문위원회의 기구 개편 및 구성원 임명 기준도 상향
 - ※ 통상 '국가지도기관 선거'에 포함하던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선거를 단독의정으로 분리하고, 위원장·부위원장(신설)·위원 등 9명 편제(14기/위원장·위원 등 7명)로 확대, 위원장/당비서, 부위원장/부총리급으로 상향¹⁵
 - 셋째, 15기 최고인민회의의 개회¹⁶와 국가지도기관 선거 절차에서 '국가 상징성'을 중심으로 이전과 차별화된 의정 형식·행사방식 실행¹⁷

14 최고인민회의의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발·검증·추천하는 실무적 절차까지 전담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당중앙위원회 간부부가 주관했고, 그 결과 보고도 당 간부부장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제15기 1차회의에서는 상임위 고길선 서기장이 대행했는데, 실제로 그간 관행화된 인사 절차를 개편하여 상임위원회의의 소관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정·군의 권력 운용에서 중요한 변화 동향으로 주목된다. 통상 당이 687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천 명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발·관리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형식상 의정활동만 관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는 당이 헌법상 국가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향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상임위원회가 총괄하게 되는 경우 앞선 14기의 최룡해 상임위원회에 비해, 15기 조용원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구성은 헌법 제91조 제13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앞선 14기까지는 위원장,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했었고, 위원장은 당 부장급이 맡아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표 8〉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상임위원회 · 부문위원회 비교

구분		제14기 제1차 회의 결과 (19.4.11)	제15기 제1차 회의 결과 (26.3.22)	비고 (신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태성	조용원	조용원
	부위원장	박철민 박금희	김형식 리선권	신규/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조용원	조용원
	부위원장	태형철 김영대(박용일, 2차회의)	김형식 리선권	신규/2
	서기장	정영국	고길선	유임
	위원	김영철 김능오 강지영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박명철 리명철 강수린 강명철 리철 (총 15명)	박광웅 리경철 박진명 리영식 서광웅 문 철 리원중 한종혁 전향순 리명철 리혁철 강명철 강지영 (총 17명)	리명철 강명철 강지영
법제 위원회	위원장	최부일(인민보안상)	리히용(검사위원장)	리히용
	부위원장	-	방두섭(사회안전상)	방두섭
	위원	김명길 강윤석 박정남 김영배 정경일 허광일 (총 7명)	김철원 최근영 박창호 최희태 김승찬 김정수 리경훈 (총 9명)	신규/7명
예산 위원회	위원장	오수용(당 부위원장)	안금철(당 경제비서)	안금철
	부위원장	-	박정근(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박정근
	위원	리히용 홍서헌 김광욱 최영일 박형렬 리금옥 (총 7명)	리철만 김철범 리명국 백성국 최영만 리건성 박지민 (총 9명)	신규/7명
외교 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당 부위원장)	김성남(당 국제비서)	김성남
	부위원장	-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
	위원	리룡남 리선권 김정숙 최선희 김성일 김동선 (총 7명)	김형식 윤정호 김성경 김성일 김성호 리해임 강지영 (총 9명)	신규/7명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 16 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의 ‘이임식’을 겸한 1차회의 개최방식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의정상 절차이다. 퇴임하는 상임위원장이 차기 “제15기 제1차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준비과정을 총괄했다. 1차회의 개최시 최룡해의 ‘사전 당부 발언’과 제15기 최고인민회의가 “...리임하는 최룡해동지에게 사의를 표하였다.”는 등 전 · 현직 상임위원장의 이임 · 취임을 정상적인 의정상 절차로 진행했다.
- 17 제15기 개최에 맞춰 △의사당 명칭 변경(만수대의사당 → 평양의사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배지 교체(인공기 → 국장 디자인) 등 의정 절차와 행사방식도 새롭게 변화시켰다.

-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의 기구 개편 · 역량 정비는 향후 ‘최고주권기관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 방향을 반영
 - 15기 상임위는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신설(1998년 9월 개정헌법)된 이후 28년간 김영남 · 최룡해 · 조용원까지 3기체제에 해당
 - 1998년 이후 10기 초대 상임위원회부터 15기까지 위원장 · 부위원장(2인) 임명자 중 3인 전원이 당 엘리트 출신으로 임명된 유일한 사례
 - 특히 조용원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당에서 장기간 활약하며 유일체제 강화에 이바지했고, 실력과 신임도를 바탕으로 ‘김정은 2.0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입법화를 통해 추진하는 중임을 담당
 -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되어 온 ‘당정책 입법활동’¹⁸을 중심으로 △최고인민회의(지방인민회의)의 의정 활동 △준법 통제 △국가수훈 제도 등 상임위원회의의 전반적인 권능 ·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조용원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정책에 주력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를 실행하는 법제화 등의 입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전망

3. 내각

- 제15기 1차회의에서는 헌법상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내각의 구성원과 “정부를 대표”(126조)하는 내각 총리를 새로 임명
 - 15기 내각은 △3위원회 △32성 △2국 · 1원 · 1은행 등 39개의 중앙기관으로 구성, 총리 외 부총리 8명 등 총 46명을 내각 성원에 임명
 - 내각 예하 중앙기구체제는 △제1부총리 직제 신설 △사회안전성 내각 편입 △선박공업성 제2경제위원회 소속 개편 등 부분적 변화 시행
 - ※ 내각 제1부총리 직제(1986년 이후 편제 복원)¹⁹, 사회안전성(2014년 13기/국방위원회 소속 변경) 재편입 등 내각의 위상 · 권능 강화 조치
 - 이미 2019년 14기부터 내각의 부총리 편제를 8명으로 늘리고 5개년계획 추진 등 경제 개선에 집중했고, 15기에도 내각 전열 재정비
 - 민수 선박건조 등을 담당하던 선박공업성을 군수 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해군력 강화 등 ‘국방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조치 병행

18 강혜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의 도구적 기능을 선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교화하고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각종 개별법을 전면적으로 제 · 개정하며 통치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년간(2012~2025년 5월) 제 · 개정된 법령은 총 556건에 달하며, 이는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제 · 개정된 전체 법령의 약 48%를 차지한다.”, “북한의 사회통제와 법제의 연관성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5), pp. 3-4.

19 1972년 주석제 중심의 국가권력기구 개편 이후 정부 기구는 정무원(1972~1997)년과 내각(1998년 이후)으로 존속해왔다. 총리와 부총리로 구성되는 정부 편제에 ‘제1부총리’ 직제를 신설한 경우는 1986년 제8기 1차회의 정무원 구성(당시 제1부총리에 홍성남 임명) 사례가 처음이며, 이후 제9기부터 폐지되었다가 제15기에 다시 복원했다.

〈표 9〉 북한의 1972년 주석제 이후 내각(정무원) 구성 사례

구분(회기별 1차)		총리	부총리(편제)	주요 성원(위원장 · 상 등)	비고(연인원)
내 각	제15기(2026년)	박태성	제1부총리(신설), 부총리 총 8명	3위원회, 32성, 2국, 1원, 1은행, 총 39개	46명
	제14기(2019년)	김재룡	부총리 8명	3위원회, 33성, 2국, 1원, 1은행, 총 40개	48명
	제13기(2014년)	박봉주	부총리 4명	3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총 38개	40명
	제12기(2009년)	김영일	부총리 4명	2위원회, 30성, 2국, 1부, 1원, 1은행, 총 37개	41명
	제11기(2003년)	박봉주	부총리 3명	2위원회, 27성, 2국, 1원, 1은행, 총 33개	37명
	제10기(1998년)	홍성남	부총리 2명	1위원회, 26성, 2국, 1원, 1은행, 총 31개	34명
정 무 원	제9기(1990년)	연형묵	부총리 16명 (겸임 6명 포함)	14위원회, 25부, 2국, 1원, 1은행, 1상사, 총 44개	55명
	제8기(1986년)	리근모	제1부총리(신설), 부총리 총 7명	15위원회, 15부, 2국, 1원, 1은행, 1상사, 총 35개	43명
	제7기(1982년)	리종옥	부총리 2명	14위원회, 16부, 1국, 1원, 총 32개	34명
	제6기(1977년)	리종옥	부총리 6명	6위원회, 21부, 1국, 총 28개	35명
	제5기(1972년)	김일	부총리 6명	7위원회, 15부, 총 22개	29명

자료 출처: 북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 제15기 내각 개편 및 인적 정비로 정책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 박태성 내각 총리 재선임과 김덕훈 제1부총리, 전현철 부총리, 리철만 농업위원장 등 당 관료 출신의 내각 요직 중용 및 재선임
 - 동시에 △부총리 7명 중 4명 △상(위원장)급 37명 중 17명을 교체하고, 현장 출신 관료를 위주로 부총리, 상 등에 임명
 - 지난 13·14기에 비해 내각의 상층부는 당 엘리트들이 많고, 하부 집행구조는 실무 엘리트들로 충원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보강
 - 교체된 부문은 기계공업성, 도시경영성, 석탄공업성, 수산성, 임업성, 재해방지성, 보건성, 철도성, 화학공업성, 문화성 등 당 제8기 기간 정책집행과 성과가 부진한 단위들에 집중

- 국가 법률제도 강화와 향후 '경찰제도' 도입 등 개편 방향 사전 제시
 -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법률제도 강화 △경찰제도 도입 △사회안전군 개편 △경찰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선전 등 방향 및 과제 제시
 - 특히 주된 목적과 의도로 △국가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 보장 △법률적 규제 완비 △실리적인 기구체계·직능 수립 등을 강조
 - 최근 시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체제유지 강화 등 대내외 수요를 고려하여 △국가보위성/국가정보국 △군 경찰총국/경찰정보총국 △사회안전성/경찰제도 준비 등 무력·정보기구의 개편을 추진 중

IV 총평 및 정치적 함의

□ ‘김정은 2.0 시대’의 국가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구성

■ 제15기 국가지도기관의 주요 직책 구성 및 권력 엘리트 인사의 특징²⁰

- (하부구조 보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에는 당·정·군의 주요 직책과 각 부문, 지역별 핵심계층이 망라, 15기에는 이전 13~14기에 비해 상부 권력층보다 하부 선도역량의 비중이 증점
- (인사제도 변화) 9차 당대회 당 지도기관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등 국가권력의 △임기제·정년제도(상부구조 확대) 실행 동향 △성과주의 평가 △일선간부 전문성 중시 등의 인사원칙 변화
- (당 지도력 강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지도기구에 핵심 엘리트 를 위시한 당 권력의 비중 더욱 확대
- (역점부문 중시) ‘김정은 시대 2.0’의 핵심과제인 △핵·국방 △건설정책 △농촌강령 △지방발전 정책 등 중요 부문의 인사 비중 강화

■ (제한성) 국가지도기관의 구조적 한계와 대내 정책적 환경을 반영

- 첫째, 14기에 이어 15기에도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는 유일체제의 상징적인 국가대표기구로 고착화
- 둘째, 최근 대북제재 장기화와 자력갱생의 한계가 누적되는 속에서 총리와 부총리, 상 등 행정관료들에 대한 문책 사례 빈발, 당의 지도력 강화 대비 행정권의 약화와 불만 등 부작용 측면도 수반
- 셋째, 권력구조의 보편적인 편향인 성비 불균형은 국가지도기관 인선에서 더 농후, 국무위와 내각 직책 중 여성은 최설희 외무상이 유일

□ 노동당 중심의 체제 운용 구조와 국가기구의 보조적 역할

■ 당 제9기와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의 일체화를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

- 9차 당대회를 ‘김정은 2.0 시대’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준비, 최고인민회의를 2년간 연장하여 당·국가권력의 운용체계를 일체화
- 동시에 당의 지배력과 지도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9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비롯한 국가목표의 추진 동력을 확보
- 5년 주기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인사 시기와 방식을 일체화시켜 당·정·군 권력구조의 정상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

20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제15기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 3개의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등에 총 106개의 직책과 약 90여 명의 인물이 임명되었다.

-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당정책 입법활동’ 활성화 전망
 - 9차 당대회 사업총화와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적시적·합리적 부문법 제정 수정·보충”과 “최고주권기관 역할 제고” 방침 천명

- 향후 2026~2031년간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 발전 목표 추진을 전담
 - 15기 국가지도기관은 5개년계획 중심의 정책과제 집행과 함께 민생 개선 등 대내외 난제를 해결해야 할 방대한 과제에 봉착
 - 핵과 경제의 병진, 자력갱생의 장기화 속에 내각을 위시한 정책구조의 전반적 부담이 가중하고 부작용 측면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 강혜련, “북한의 사회통제와 법제의 연관성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5), pp. 2-10.
- 김근식,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정·군관계 그리고 권력 엘리트.” 『한반도 포커스』.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36호, 2016, pp. 19-26.
- 김인태, “김정은 시대 당정시스템의 운용과 주요 정책결정 사례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September 2025, No. 344.
- 김일기, “북한 헌법 개정의 특징과 의미,” 『평화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9).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조선로동당 규약』, (1980, 2012, 2016, 2021).
- 『사회주의헌법』, (2009, 2016, 2019).
- 『로동신문』, 1960.1 ~ 2026.3
- 『조선중앙통신』, 2005.1~2023.3
- 『조선말대사전(1~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Abstract

The 15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An Analysis of State Leadership Institutions and Power Elites

In-tae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llowing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15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rch 15, North Korea convened the First Session from March 22 to 23 and formed new state leadership institutions. Given the regime’s defining characteristic as a leader-centered, long-term system, the electoral process fo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key procedure underpinning both the head of state’s representational legitimacy and the monolithic leadership structure. The 687 deputi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ncompass major positions and core strata across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Compared to the 13th and 14th assemblies, the 15th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lower-tier core cadres and leading operational personnel relative to the upper echelons of the power hierarchy.

The Workers’ Party of Korea prepared its Ninth Party Congress in February as a political milestone to formalize the “Kim Jong Un 2.0 era.” In line with this, the five-year ter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as extended by two years, integrating the operational frameworks of Party and state power. By aligning the Party Congress’s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personnel timing wit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regime enhanced the normalization and efficiency of managing the Party-state-military power structure.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was reorganized around highly trusted close aides, primarily holding key positions in Party, economic, and diplomatic sectors.

Jo Yong-won,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long served as a top aide within the Party to Kim Jong Un, playing a leading role in stabilizing and strengthening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He has now assumed the

critical responsibility of advancing the vision and tasks of the “Kim Jong Un 2.0 era” through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as head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Going forward, the overall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Standing Committee are expected to be further activated,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to implement Party policies. The Cabinet has also been reorganized, prioritizing the implementation of Party policies and economic improvement, with personnel vetted both within the Party-state power structure and in practical administrative settings. Attention will focus on how the power elites appointed to key posts within the 15th Supreme People’s Assembly’s state leadership institutions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during the 2026-2031 period, and on the outcomes they produce.

Keywords: Supreme People’s Assembly, Constitution, State leadership institutions, State Affairs Commission, Cabinet, Jo Yong-wo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April 2026
No. 376